

#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bmrkim@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현황,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22.11.22.

No.1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약 정리하였음. 또한 공청회 이후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요약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
  - 이러한 패턴은 총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
-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단순한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 수준은 대체로 인하하는 추세가 확인
  - 최근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한 해외 주요국 사례가 다수 관측
  - 우리나라는 4단계 이상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2개의 OECD 회원국 중 하나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누진적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이며, 법인세율 수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혁신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
  -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
-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국제적 표준, 누진구조에 대한 부정적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는 단순화할 필요성 존재
  -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 수준, 해외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 검토가 가능

## 01 들어가는 글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
  - 법인세는 세원의 국제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여타 세목에 비해 해외 정책동향을 참고할 필요성이 높은 세목

## 02 현황,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 1.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 (법인세율 체계)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
  - 과세표준 구간 및 적용 세율은 <표 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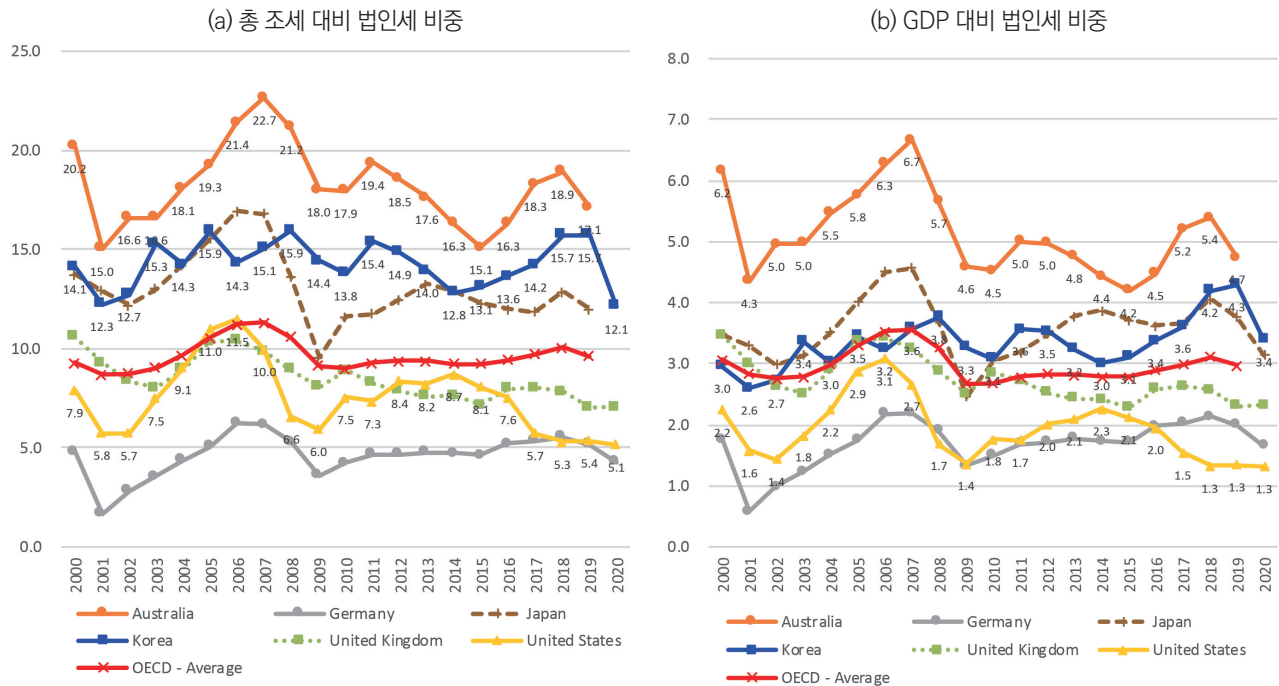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2020년까지 지속
  - 이러한 패턴은 (a) 총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과 (b)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

표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주: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생략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하회<sup>1)</sup>

- 우리나라는 4단계 이상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2개의 OECD 회원국 중 하나

## 2. 해외 주요국 제도현황 및 정책동향

- (세율체계) 해외 주요국 대부분 단일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2단계 세율체계를 채택하는 국가가 다수
  - 총 4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단일세율 체계 27개국, 2단계 세율체계 15개국으로 절대 다수의 국가가 단순한 세율체계를 채택
    -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단일세율 24개국, 2단계 세율 11개국으로 유사한 현상 관측

- (국제적 최고세율 추이) 2000년 이후 해외 국가들은 대체로 법인세율을 인하
  -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추이는 OECD, EU, G20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측
  -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최고세율 인상(22%→25%)은 국제적 추이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 해외 주요 국가별로 정책동향을 살펴봐도 최근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사례가 다수 관측
  - (미국) 2018년부터 기존 15~39%의 누진세율 체계를 21%의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

표 2 해외 주요국 법인세율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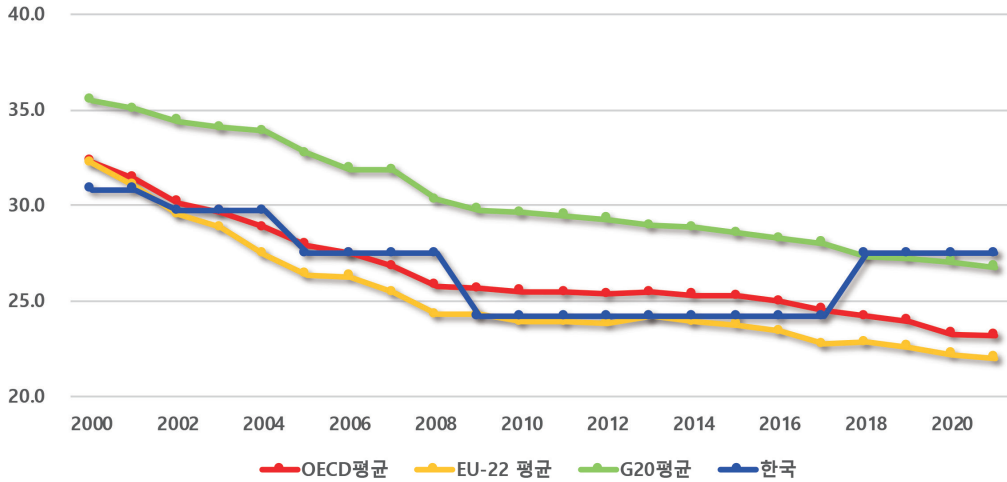
단일세율(27개국)		2단계 세율(15개국)		3단계 세율(3개국)		4단계 이상 세율(3개국)	
미국	영국	단일세율 + 경감 1단계 세율	호주	단일세율 + 경감 2단계 누진세율	룩셈부르크 중국	단일세율 + 경감 4단계 누진세율	코스타리카 (총 5단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칠레				리투아니아
멕시코	핀란드	단일세율 + 경감 2단계 누진세율	폴란드	3단계 누진세율	아르헨티나	4단계 누진세율	한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2단계 누진세율	인도	네덜란드	홍콩		
스페인	슬로베니아		프랑스				
튀르키예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스라엘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스	라트비아		인도네시아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 주: 1. 각국의 세율체계는 중앙정부 기준  
 2. 파란색으로 표기한 국가는 OECD 회원국  
 3. 라트비아는 소기업 소유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개인소득세를 대체하는 '영세기업세'를 통해 소기업의 매출액에 대하여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세가 아닌 별도 세목임을 고려하여 단일세율 국가로 분류  
 4. 캐나다는 내국인 소유 비상장법인(CCPC)에 대하여 2단계 누진세율 적용  
 5. '단일세율 + 경감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더라도, 경감세율의 최고세율이 표준 단일세율과 같은 경우 2단계 세율 국가로, 다른 경우 3단계 세율 국가로 분류

자료: OECD Statistics,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IBFD Country Survey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황은 공정회 발제자료 참조

그림 2 국제적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OECD, EU, G20 평균)



주: 1. OECD(2021)를 따라 EU-22는 EU 국가 중 OECD에 속한 모든 국가를 포함, G20은 모든 G20 국가 중 EU 회원국을 제외하여 평균 수치 계산  
 2. G20 평균 계산 시 2000~2001년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2002~2004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 Key Tax Rate Indicators," 2021, p. 17 그림과 OECD Tax Database;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PWC Worldwide Tax Summaries 자료를 이용하여 재계산

- (영국) 2015/16 회계연도부터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
  -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최근 철회한다고 발표<sup>2)</sup>
- (일본)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14년 25.5%에서 2022년 23.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
- (프랑스)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였고, 최고세율은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로 지속적으로 인하
- Bergner et al.(2017), Hosono et al.(2020), 김학수(2016) 등
- 조세 중립성 저해, 조세혜택을 위한 기업들의 인위적 성장 결정 왜곡 등을 관측
- (법인세율 수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 국제적 자본 이동, 혁신성,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연구 결과가 상이
  - (기업 투자)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실증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한 연구 대부분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 Dobbins and Martin(2016), Djankov et al. (2010), Vartia(2008), 조명환(2012) 등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
    - Shah(2006), 김우철(2006) 등 법인세 부담 완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일부 존재

### 3. 관련 선행연구

- (기업규모 기준 조세정책)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와 같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대다수

2)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법인세율 인상안을 철회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이를 재차 반복하여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예정

- (국제적 자본이동) 국제적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투자를 유입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Tavares-Lehmann et al., 2012)
- (혁신성) 법인세율 인하의 혁신성 제고효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존재
  - Schwellnus and Arnold(2008), Gemmell et al.(2016) 등은 높은 법인세 부담이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김학수·김빛마로(2017)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위험부담행위(risk-taking behavior)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기업들은 특히 세율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 (경제성장)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존재
  - Romer and Romer(2010), Arnold et al.(2011), Mooij et al.(2018) 등은 법인세율 또는 조세 부담 수준과 경제성장 사이에 비교적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를, 전영준(2003)은 제한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
  - 반면, Xing(2012) 등 법인세율 인하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상존

##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
  - 대부분 OECD 회원국은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
  - 법인세 누진구조 또는 기업규모 기준 조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
- 해외 정책동향, 선행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 검토 가능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높은 편이며, 해외 주요국도 대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
  -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 현 시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분석이 수행될 필요
  -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도 병행될 필요

### 참고문헌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학수,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김학수·김빛마로,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전병목·오종현·김학수,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생산성, 투자,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전영준, 「CGE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9(2), 2003, pp. 135~182.

- 조명환, 「법인세제가 기업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14(1), 2012, pp. 3~40.
  - Bergner, Sören, Rainer Bräutigam, Maria Evers, and Christoph Spengel, “The Use of SME Tax Incentives in the European Union,” ZEW –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7-006, 2017.
  - Djankov, Simeon, Tim Ganser, Caralee McLiesh, Rita Ramalho, and Andrei Shleifer,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3), 2010, pp. 31~64.
  - Dobbins, Laura and Martin Jacob, “Do Corporate Tax Cuts Increase Investment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46(7), 2016, pp. 731~759.
  -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2~2021 각 연도.
  - Gemmell, Norman, Richard Kneller, Danny McGowan, Ismael Sanz, and José F. Sanz-Sanz, “Corporate Taxation and Productivity Catch-Up: Evidence from European Firm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20(2), 2016, pp. 372~399.
  - HOSONO, Kaoru, Masaki Hotei, and Daisuke Miyakawa, “The Effects of a Size-Dependent Tax Policy on Firm Growth and Finance: Evidence from Corporate Tax Reform in Japan,”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7-E-050, 2020.
  - Mertens, Karel and Morten O. Ravn, “The Dynamic Effects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4), 2013, pp. 1212~1247.
  - Mooij, Ruud De, Shafik Hebous, and Milena Hrdinkova, “Growth-Enhancing Corporate Tax Reform in Belgium,” *Nordic Tax Journal*, 2018(1), 2018, pp.1~17.
  - OECD, “Tax Database Key Tax Rate Indicators,” 2021. 9.
  - Romer, Christina D., and David H. Romer,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ax Changes: Estimates Based on a New Measure of Fiscal Shock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3), 2010, pp. 763~801.
  - Schwellnus, C. and Arnold, J., “Do Corporate Taxes Reduce Productivity and Investment at the Firm Level?: Cross-Country Evidence From The Amadeus Datase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41, OECD Publishing, Paris, 2008.
  - Shah, Anwar, *Fiscal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Innovation*, World Bank, 2006. 4.
  - Tavares-Lehmann, Ana Teresa, Ângelo Coelho, and Frederick Lehmann, “Tax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A Literature Review,” *Progr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Vol. 7, 2012, pp. 89~117.
  - Vartia, L., “How do Taxes Affec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An Industry-Lev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56, OECD Publishing, Paris, 2008.
  - Xing, Jing, “Tax structure and growth: How robust is the empirical evidence?,” *Economic Letters*, 117(1), 2012, pp. 379~382.
- 〈웹 사이트〉
- IBFD Country Survey, <https://research.ibfd.org/#/>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OECD Tax Database, <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
  - KPMG, <https://home.kpmg/kr/en/home.html>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토론요약 | 법인세 공청회 전문가 토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 중반대로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0년 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와 다르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불가피한데,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8위로 조사됨
  - 결국 높은 법인세율은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은행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R&D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면 혁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급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하에서 기업 과세도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적 성장의 극대화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반적인 조세부담률과 미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단순히 명목세율 위주의 감세는 문제가 있음
    - 명목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로, 공제 및 감면제도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혹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함
- 3%p의 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1.7~2%의 투자를 증가시켜 GDP를 0.3~0.9%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의 전제는 미래의 이천지출을 축소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불리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도울 것으로 예측됨
  - 이천지출 축소가 불가능하다면 소득세를 증세하거나, 사교육이나 금융, 보험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을 축소, 담배와 주세 같은 미래환경세 등으로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세율이 낮고, 조세지원이 크고 이자율이 낮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며 투자는 확대됨
  - 그러나 현재는 물가상승 압박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고물가 압력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도구로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자본에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실증적으로 사용자 비용 1%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0.34~0.57% 확대한다는 기업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있음

- 산업별·연도별 패널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1%p 인하가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을 0.46% 증가시키고, 취업자 수를 0.13% 증가시켜 실질 GDP 0.21%를 제고한다는 토론자 본인의 연구 결과도 있음

- 법인세율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은 국제기준을 반영하되, 법인 과세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과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본세율은 22% 내외로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일부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최저한세제는 폐지하고, 종합감면한도율이라는 것을 신설했으면 함
    - 현재 최저한세가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유사한 소득의 기업에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개편하기 위해 종합감면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인세율을 5년 전으로 돌리게 되었을 때의 효과를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3%p 이상 내리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든 가족법인 등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소득을 벌려고 할 수 있음
    - 즉, 경제행위는 동일하데 법 형식 선택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됨
- 따라서 법형식중립적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 폭을 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율 조정도 연동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때 주 고려대상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새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아닌 이를 제외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될 것이고 이러한 소득 유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음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0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을 때 기업이 고용 혹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임금 혹은 배당을 늘렸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같은 보수 정부임에도 기업의 소득은 늘었지만 사회로 환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음
- 기업소득을 늘렸을 때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상처럼 투자나 배당이 늘지는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있음
- 우리의 명목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명목세율을 낮출 것이라면 공제감면제도 또한 한번에 없애서 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여론조사 I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 2022년 7월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배당금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제도 등을 개정함. 이에 본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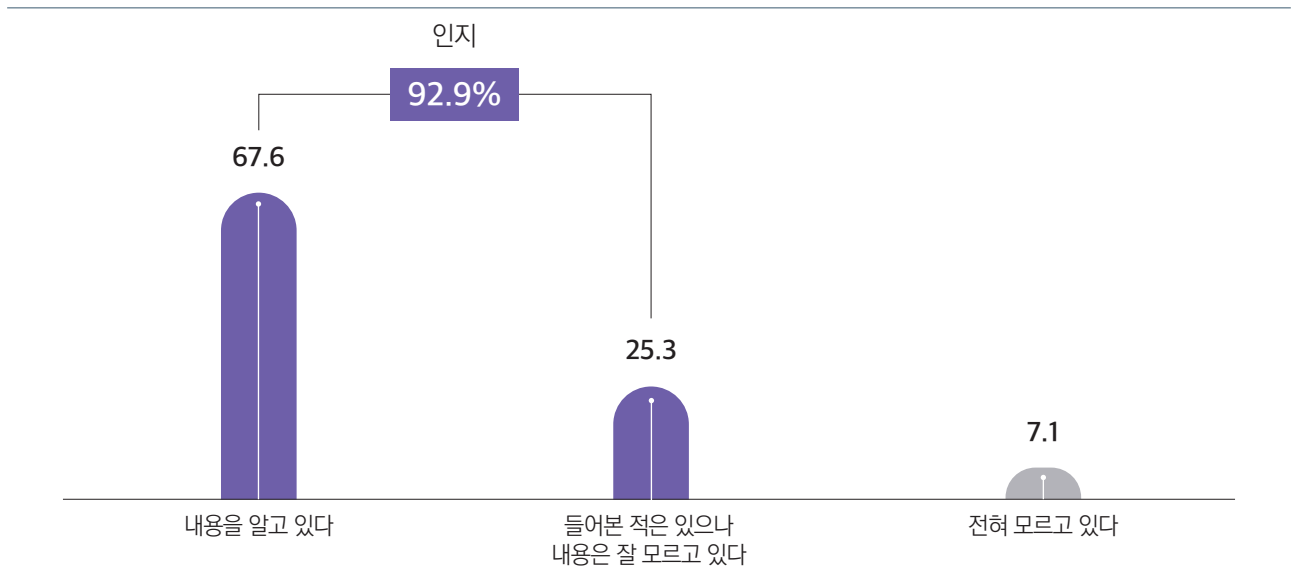
### 〈조사개요〉

<p>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및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li> <li>*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회계담당자</li> </ul> </li> </ul>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리스트에 작성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조사URL 발송 후 웹 조사(CAWI) 및 모바일 조사(CAMI) 병행</li> </ul> </li> <li>•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서 제공한 업체 대표 번호를 통해 재무/회계담당자와 사전접촉 시도</li> <li>* 재무/회계담당자가 전달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조사URL 발송 후 웹 조사(CAWI) 및 모바일 조사(CAMI) 병행</li> </ul> </li> </ul> <p>※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CAMI(Computer Aided Mobile Interview)</p>
<p>조사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명(전문가 70명, 기업체 100명)</li> </ul>
<p>조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2022년 9월 15일 ~ 9월 24일</li> <li>• 기업체: 2022년 9월 15일 ~ 9월 26일</li> </ul>
<p>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리서치</li> </ul>

● 과표구간 단순화 개편방향 인지 여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방향(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9%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67.6%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91.4%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체는 51.0%만이 내용을 알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높음

Q. 최근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을 단순화(4단계 → 2단계)하고, 세율체계를 조정(10%, 20%, 22%, 25% → 20%, 22%)하는 등 법인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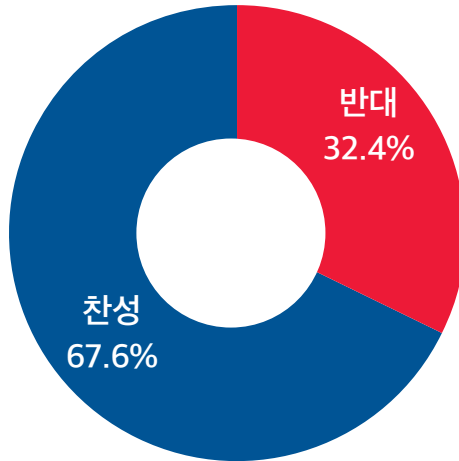
구분		내용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체		67.6	25.3	7.1
구분	전문가	91.4	8.6	0.0
	기업체	51.0	37.0	12.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29.7	48.6	21.6
	중견기업	56.4	35.9	7.7
	대기업	75.0	20.8	4.2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찬성 비율은 전문가와 기업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업체 규모별로 대기업은 83.3%가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은 51.4%가 찬성함

Q.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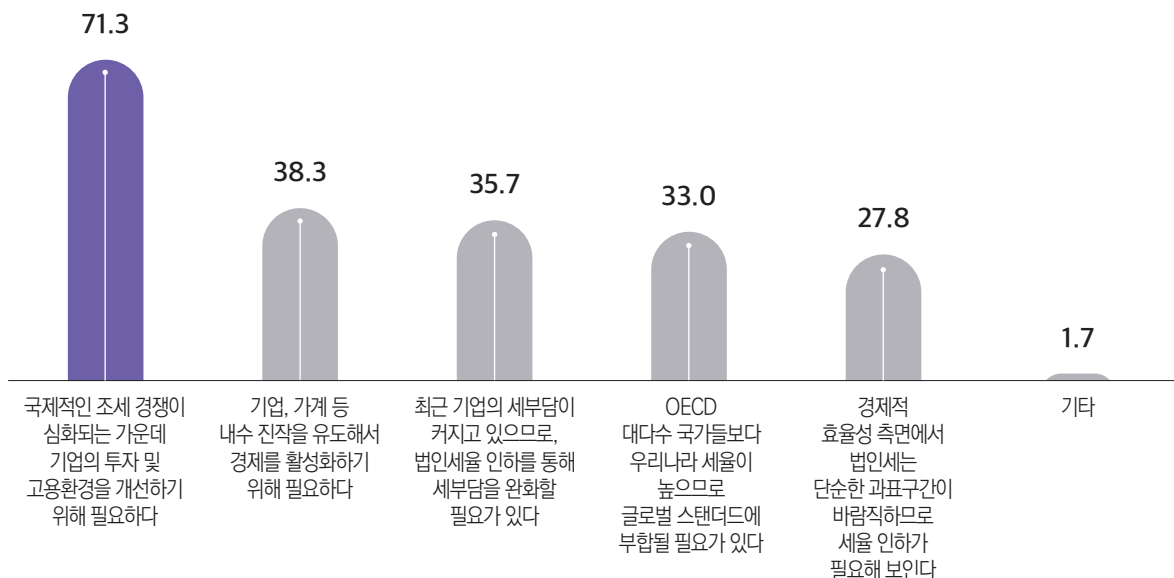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67.6	32.4
구분	전문가	68.6	31.4
	기업체	67.0	33.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51.4	48.6
	중견기업	71.8	28.2
	대기업	83.3	16.7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Q.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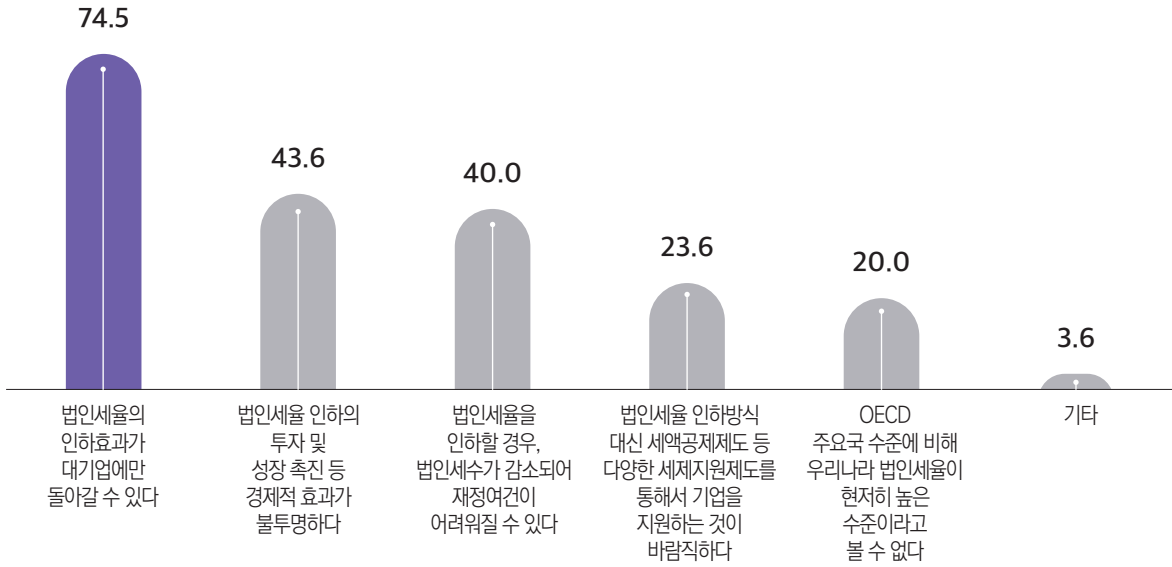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인세율의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Q.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단위: %, 복수응답)



●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시 투자 고용 확대 의향

-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0%가 향후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47.0%로 나타남
  - 기업체 규모별로 중견기업은 투자 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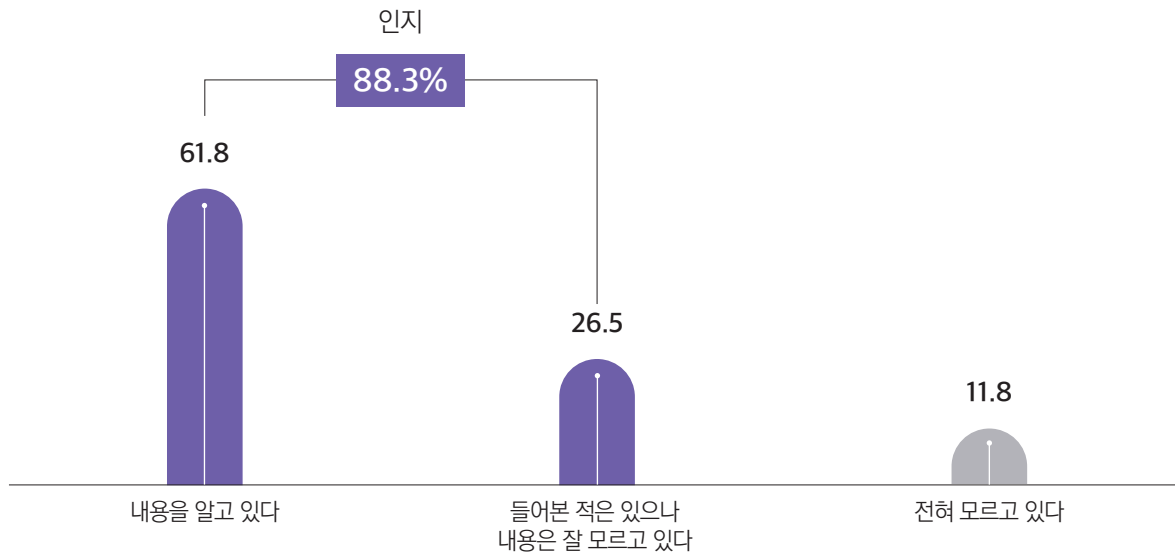
Q.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향후 내년도 투자·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단위: %)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 인지 여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8.3%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8%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는 85.7%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체는 45.0%만이 내용을 알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35.1%만이 내용을 알고 있음

Q. 최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원)까지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단위: %)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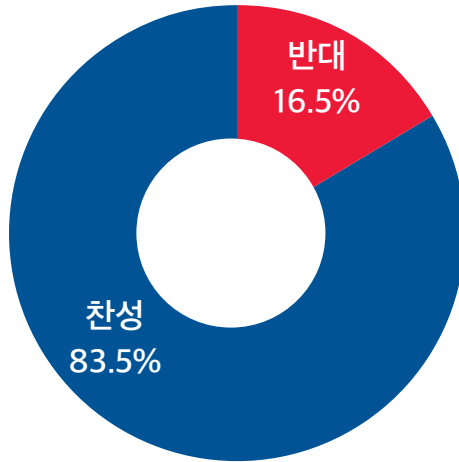
구분		내용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체		61.8	26.5	11.8
구분	전문가	85.7	10.0	4.3
	기업체	45.0	38.0	17.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35.1	45.9	18.9
	중견기업	48.7	35.9	15.4
	대기업	54.2	29.2	16.7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 이전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Q. 이전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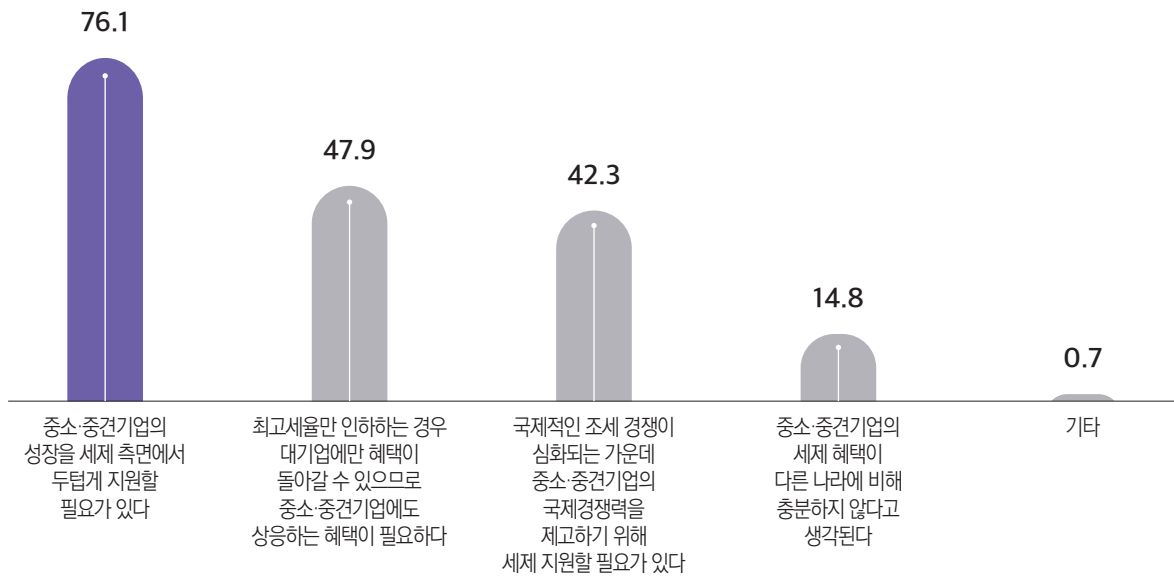
(단위: %)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찬성하는 이유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가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체 규모별로 중소기업 (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Q.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단위: %, 복수응답)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고세율만 인하하는 경우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에도 상응하는 혜택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타	
전체	76.1	47.9	42.3	14.8	0.7	
구분	전문가	73.1	42.3	51.9	15.4	1.9
	기업체	77.8	51.1	36.7	14.4	0.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68.6	48.6	42.9	8.6	0.0
	중견기업	84.4	62.5	37.5	18.8	0.0
	대기업	82.6	39.1	26.1	17.4	0.0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

-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현재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가 53.6%로 가장 높음

Q. 낮은 세율 과표구간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단위: %, 복수응답)

